

# 新 복지국가의 전략과 과제

## -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 과제

[주최]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일시] 2012. 5. 30 (水) 15:00~17:00

[장소]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A룸

<사회>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발표>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

김주훈 KDI 부원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2012년 제2차 헤럴드경제 紙上 좌담회 진행(案)

1. 일 시 : 5월 30일(수) 오후 3시
2. 장 소 :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A룸
3. 주 최 :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HERI)
4. 大주제: **新복지국가의 전략과 과제**  
 小주제: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 과제

### 〈 토론회 내용 및 발표자 〉

구분	시간	주제 및 목차 (例示)	발표자
주제 발표 1	10분	- <b>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 과제</b> · 성장-복지 선순환의 중요성 ·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과제 · 新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복지 선순환 등	<b>이영선 명예교수</b> (연세대)
주제 발표 2	10분	- <b>新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복지 선순환</b> · 新성장동력산업 육성의 중요성 · 新성장동력 산업 육성 방안 · 新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 · 新성장산업 육성의 효과 등	<b>김주현 부원장</b> (KDI)
주제 발표 3	10분	- <b>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복지 선순환</b> · 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 · 복지 관련 서비스업 현황과 육성 방안 · 복지 관련 서비스 일자리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 복지 관련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과제 등	<b>김용하 교수</b> (순천향大, 前보건사회연구원장)
종합토론			사회 : 김주현 원장
- 정책제언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세미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 I.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 과제

이 영 선 연세대 명예교수

### 1. 복지 수요증가의 배경

- 복지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욕구의 증대 이유:
  - 1) 불평등, 양극화의 확대(기술변화와 세계화에 의해 야기 됨)
    -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의 추세 확산
  - 2) 인구구조, 가족단위의 변화
    - \*노령화의 급속한 진행
    - \*핵가족의 확산과 저출산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맞벌이 부부 증가와 교육비의 증가
- 따라서 복지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불평등의 보정을 위한 소극적 요인과 인구구조적 변화에 따른 적극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2. 성장과 복지 사이의 관계

- 성장을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의 확립과 시장의 엄정한 상벌기능(incentive 체제)의 확립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자유 시장제도는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유발
- 복지도 자원을 필요로 하므로 성장 없이는 복지의 증대가 불가능함. 따라서 성장과 복지는 같이 가야하면서도 성장이 야기할 수 있는 불평등의 증대가 더 큰 복지에 대한 욕구를 초래할 경우 성장에 대한 저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즉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감수되어야 하나 그 이상의 불평등의 확대는 시장경제에 대한 반감을 유발하여 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를 교정하기 위한 복지지출의 증대가 성장을 약화시킬 수도 있음
- 따라서 성장과 복지가 지속가능한 선순환의 과정을 이룰 수 있는 균형관계의 수립이 관건임

### 3. 효율적 복지체제의 구성의 필요성

- 같은 규모의 복지지출이라도 복지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국민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고, 또 성장을 저해하거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등의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복지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즉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체제의 구축을 위해 복지체제의 효율적 내용구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 국민에 대한 최대의 복지수요는 일자리 창출에 있음. 일 자체가 복지일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한 수입의 증대는 복지문제를 국민 스스로 해결하게 함. 따라서 일자리창출은 성장과 복지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이 되게 함
-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지활동에 최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임. 예컨대 아동보육,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 등이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높고 또 복지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음
- 과도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성을 도모해야 함
- 예컨대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는 정책은 그 효율성을 고려해야 함
  - 저소득층에게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일은 장기적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해 줌으로써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관계에 도움을 줌
  - 그러나 반값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교육의 질이 하락할 위험이 있음.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크게 확대한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됨. 따라서 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날 것임
  - 따라서 대학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장학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화하는 need based scholarship 제도로 하고, 그 재원을 공공부문, 즉 정부의 지원이나 소득세를 감면 받은 민간 기부금으로 할 필요가 있음. 필요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은 불평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에 크게 기여할 것임
- 과거에는 성장 자체를 중시해 왔으나 이제는 성장의 내용을 점검해 보아야 함. 성장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내용의 성장이어야 함. 그런 면에서 일자리 창출이 없는 성장은 그 성장의 결과가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한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
- 국민의 행복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산업 예컨대 환경, 신에너지, 평생-직업교육 등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 II.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김 주 훈 KDI 부원장

### 1. 신성장동력산업의 중요성

-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이로부터 파생된 성장과 분배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 '고용없는 성장' 또는 '근로빈곤층'의 양산으로 나타난 분배구조의 악화로 성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대두
    -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동력이 제조업 수출로 집중되었고 중국 등 개도국과의 경쟁을 따돌리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기술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고용 증가가 둔화
  -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복지체제의 강화 등 분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졌음
    - 그러나 분배구조의 악화가 저성장에서 기인함에도 고성장 부문에서 복지 재원을 염출하려 할 경우 성장의 유인을 낮추어 저성장의 악순환 구조에 빠질 수 있음
- 그러므로 성장과 분배간 갈등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이 실현될 수 있으려면 고용을 수반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모색될 필요

### 2. 신성장동력산업의 의미와 발전 가능성

- 신성장동력산업은 통상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성이 매우 높아 국부 증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을 말하지만 국민경제가 처해 있는 시대적 여건에 따라 다소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
  - 과거 개발년대에 성장은, 공장 신설을 통해 고용의 증대를 함께 수반하였음. 그 대신 전반적으로 산업이 발달해 있지 못하므로 산업연관효과 또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의미하였음
    - 예를 들어, 철강산업이 육성되어야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의 발전이 유발될 수 있었음

- 근래에는 제조업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전개됨에 따라 성장과 함께 고용창출이 신성장동력산업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
  
- 또한 신성장동력산업의 갖는 '신산업'의 의미도 시대적 국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 과거 기술도입단계(catch-up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신제품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이 해외 선진국에서 기개발되었지만 국내로 이식될 수 있으면 신산업에 해당
  - 현재는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할 신기술 또는 신산업이 없는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국에서조차 새로운 산업인 산업이 '신산업'으로서 의미를 가짐
    -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신산업이 창출되고 이와 연관된 산업들로 수요가 유발되면서 성장과 고용의 확대가 유발되는 산업군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칭될 수 있음
    - 대표적 사례로서 IT산업을 들 수 있음. 근래에는 바이오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산업들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기대
  
- 이처럼 기술혁신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은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선도하고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제
  - 그럼에도,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등과 같이 투자성과의 향유가 비배타적인 분야가 넓어지고 투자기간도 장기화되는 난점을 가짐
  - 또한 기술혁신에는 실패의 위험(risk)이 항상 따르므로 과거 기술학습의 단계에서와 같이 투자대비 성과가 높지 않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함
    -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특성과 점증하는 글로벌 생산체제의 확대 등을 감안해 볼 때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적
    - ※ 1980년대 중반, PC의 출현으로 미국에서 IT산업이 태동되어 실리콘밸리가 조성되었지만 IT 벤처업체들은 초기부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해외생산을 추진하여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서는 제한적인 효과를 가졌음

- 이처럼 혁신에 의한 공급창출의 방식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의 변동 등으로 새로이 생겨나는 신규수요의 선점 등을 통해서도 신성장동력산업이 육성될 수 있음
  - 혁신에 의한 공급창출 방식에서는 거대규모의 투자가 소요되고 실패의 위험도 높은 반면, 신규수요의 포착 방식에서는 신속한 정책대응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음
    - 다만, 산업계와 정책당국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의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
  
- 우리 경제는 경제개발에 착수한 이래, 최근까지 제조업 수출을 위한 불균형 성장전략을 고수해왔음. 그 결과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내수기반이 취약한데 이는 향후 잠재적 발전영역이 될 수 있음을 의미
  - 제조업 중심의 기존 경제구조의 변혁과 내수에 안주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개혁에 대한 반발이 해소될 수 있음이 잠재적 성장동력원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는 해외생산의 확대로 신흥개도국들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들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집약적 핵심 부품·소재와 마케팅 등 서비스 기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신장
  - 선진국에서는 자국 기업들의 해외생산 이전으로 제조업 비중은 축소되는 반면에 해외생산을 통제·조정하기 위한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
  - 해외생산 초기 단계에서는 개도국 현지 자회사로 다국적 기업 본사로부터 서비스 기능이 공급. 그러나 개도국의 경제발전으로 자국기업들의 성장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수출 확대 등에 필요한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 1980년대 이후 서비스 교역의 증가율이 상품교역보다 높아졌고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그 증가속도가 가속되고 있음
  
- 신흥개도국들의 산업화는 선진국 다국적기업들과 공통의 이해관계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 산업화에 수반되는 도시화는 개도국들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
  - 산업인력의 도시 집중으로 에너지, 교통, 주택, 의료, 교육, 환경 등 여러 부문에서 최소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

- 이는 도시화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시설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 서비스 기능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의미

### 3.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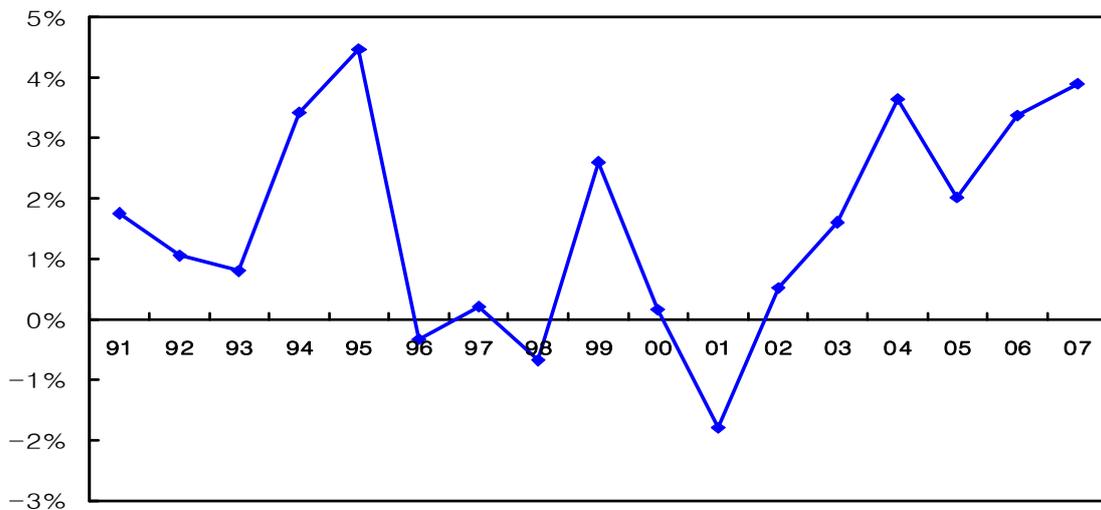
#### 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 외환위기 이후 성장의 둔화는 주로 서비스산업의 성장 저하에 기인

- 제조업은 1990년대 전반기에 성장이 저하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다시 회복되어 점차 성장률이 증가되는 U자형 곡선을 그림
  - 이는 1990년대 초 중국의 산업화로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붕괴되었으나 R&D 투자 등의 대대적인 노력으로 IT, 자동차 등 기술 집약적 산업의 성장이 회복된 것에 기인
- 서비스업은 성장률이 다소 하락 추세에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고 GDP 비중이 높아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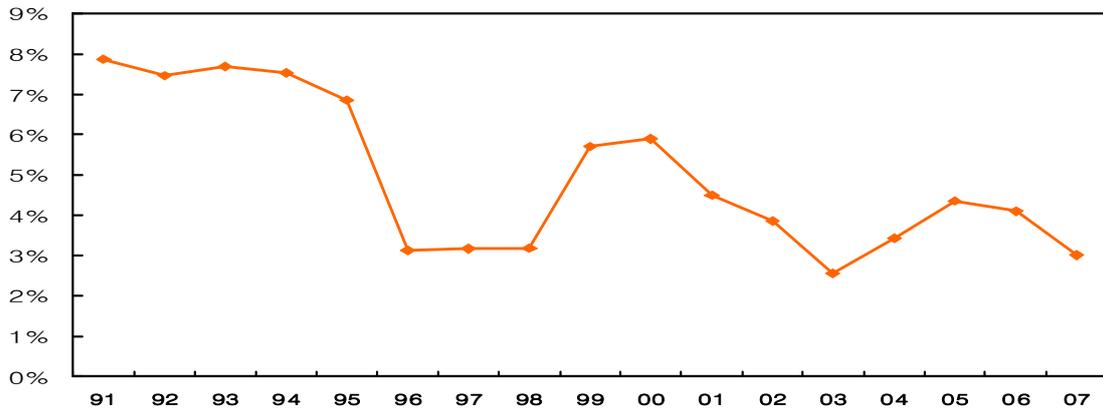
\*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 ('90~'97) 6.7% ('99~'07) 8.1%  
 서비스업의 연평균 성장률: ('90~'97) 6.5% ('99~'07) 4.3%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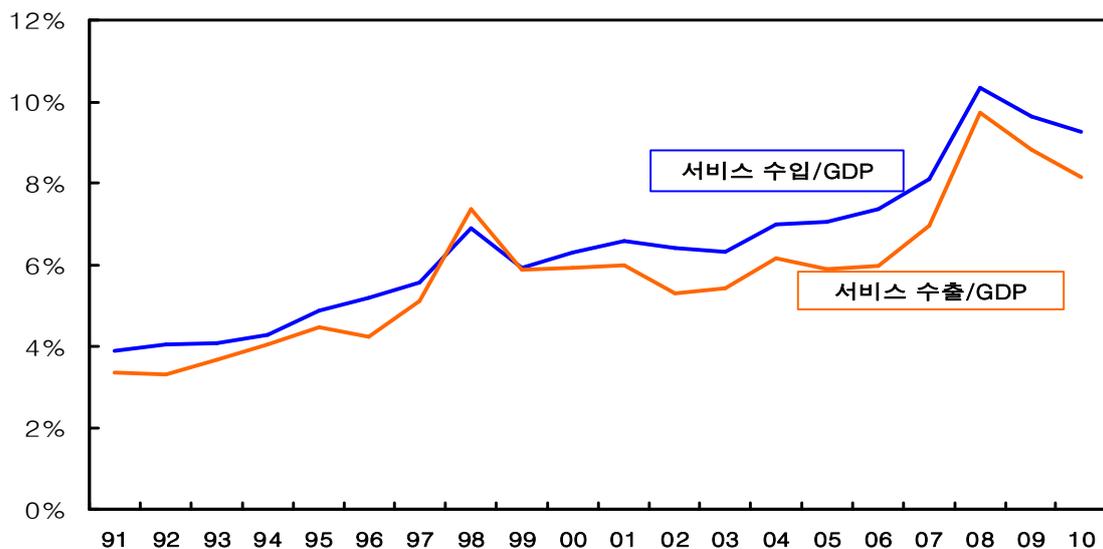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산업의 성장률이 저하된 것은 경제개방화에 따른 해외 경쟁 노출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외환위기 이전에는 외환규제로 인하여 해외에서의 서비스 구매에 극히 제약을 받았음. 이에 따라 국내에서의 소비가 강제로 이루어지므로 서비스 사업자들은 외국과의 경쟁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음
  - 외환위기 이후 해외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확대되었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작자 폭이 일시 축소되었다가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다시 적자 폭이 확대

GDP 대비 서비스 수지적자의 비중 추이



## II.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 서비스산업이 해외경쟁에 노출되고 소비 고급화가 진행됨에 따라 영세 사업체들의 퇴출이 확대되고 대형업체들의 성장은 높아지는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중
  - 1990년대 제조업의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2000년대 서비스업의 구조조정으로 저숙련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가중

서비스산업의 계층별 구조조정 실태(2000~06년)

규모	고용 증가율	매출 증가율
총계	2.2%	7.6%
1~4인	-2.2%	4.2%
5~9인	5.8%	6.2%
10~19인	3.0%	6.4%
20인 이상	11.5%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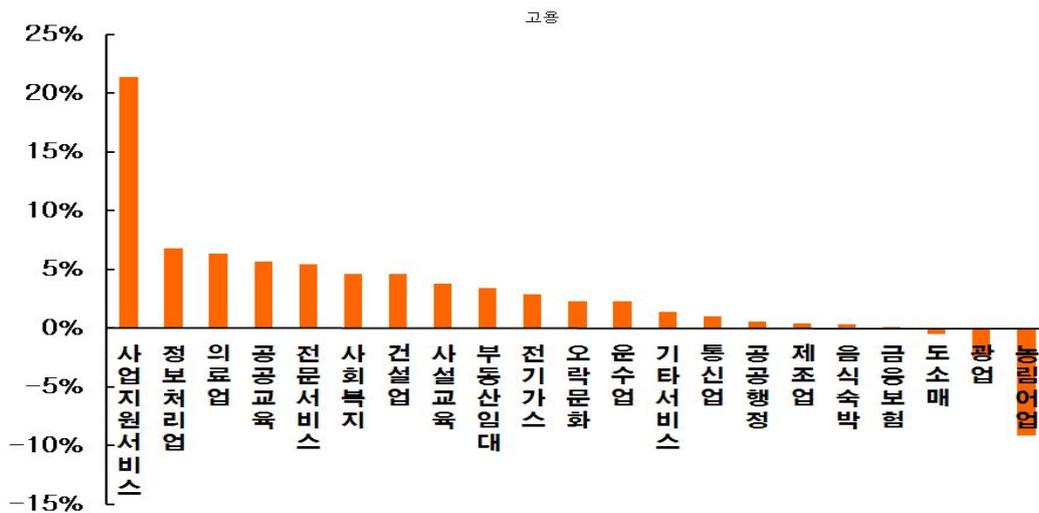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 「도소매업 총조사 보고서」

- 그러므로 서비스업에서 성장과 고용창출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식기반의 확충 및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본유입의 확대가 추진되어야 함
  - 필요조건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적 구조가 확대되어야 함
    - 진입이 손쉬운 생계형 서비스업에서는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나
    - 전문서비스업종 등에서는 자격사 제도 등을 통해 진입제한의 장벽을 쌓고 있고 또 업종내에서 경쟁을 제한하여 기업규모의 확대를 저해하고 있음
  - 지식기반의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와 창의적 인력양성이 필요함
    - 평생 재교육 및 노동시장 정보 제공의 확대를 통해 퇴출인력들에 대한 재교육이 강화되고 성장부문으로의 재진입을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되어야 함
  - 청년층 취업의 확대를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또는 수출)이 확대되어야 함
    - 내수시장에 고착된 상태에서 진입장벽을 제거할 경우 일자리의 질적 악화가 우려됨
  - 제조업과 융합된 서비스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국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기 위한 서비스 투입의 확대가 필요하며 해외 개도국들의 서비스 수요 증대에 대응할 필요
    - 전략적으로 제조업 강국의 입지를 활용하여 제조업에서 파생되는 사업 서비스업의 육성이 시급함

## II.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 \* 예: 물류업, 디자인 및 SW, 엔지니어링 등
- 현재 서비스 수지적자가 가장 큰 부문은 사업서비스업이므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경우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수출 증대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음
-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체계가 구축될 경우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부문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 산업부문별 고용 증가율(2000~06년)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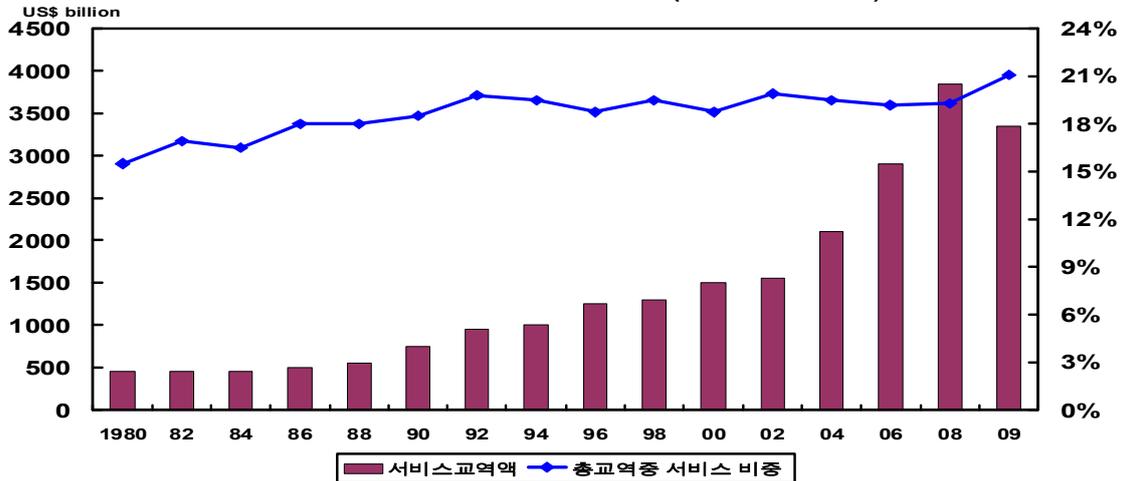
### ② 서비스 수출의 확대 전략

- 글로벌화로 인하여 범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있음. 제조업 생산 기능은 생산비가 낮은 개도국으로 이전되는 한편 지식기반의 서비스 기능은 선진국으로 특화되고 있음
  - 제조생산에서 지식기반으로 비교우위가 이전되는 과정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의 경우에 서비스 산업의 육성은 향후 성장동력의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
  - 더욱이 글로벌화와 IT화로 인하여 서비스 교역이 확대되는 여건을 맞아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탈피하여 해외시장까지 병행하여 확대할 경우 선진화 추진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지난 30년간 서비스 교역의 증가율은 상품교역보다 높았음. 서비스 교역의 확대는 사업서비스의 교역 확대에 주로 기인함

## II.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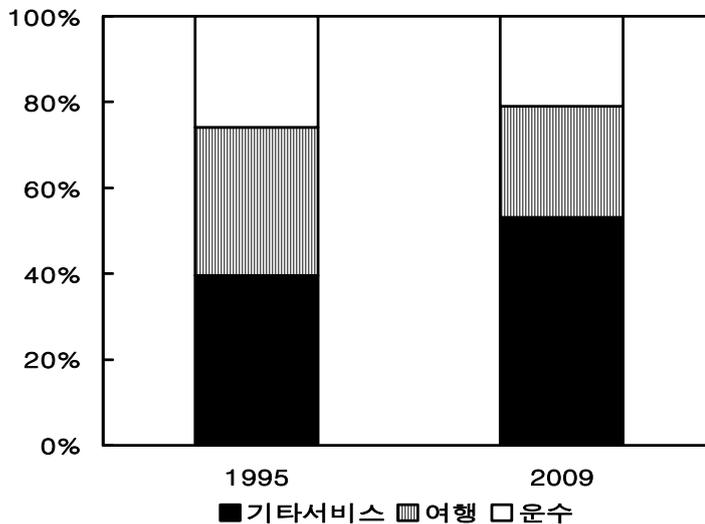
- 1980년~2009년 동안 서비스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7.9%임에 비해 상품 교역 증가율은 6.6%에 그쳤음. 그러나 아직은 서비스 교역규모가 상품교역의 약 1/5 수준에 있음
  - 서비스 수지 흑자국은 미국, 영국 등 지식기반이 높은 선진국

세계 서비스의 수출규모 및 총교역(상품+서비스)중 비중



자료: WTO, 「Measuring Trade in Services」, November 2010.

세계 서비스 교역 구성비의 변화



자료: WTO, 「Measuring Trade in Services」, November 2010.

- 서비스산업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잠재적인 국제경쟁력을 가지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종들을 선택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구체화 작업이 추진될 필요

- 개별적 업종들의 선정과 함께 제조업 또는 건설업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수출품목들도 검토가 필요
  - 앞서 신흥개도국들의 도시화에 필요한 SOC 설비 및 이에 체화되는 서비스가 융합된 대형 플랜트, 시공프로젝트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여기에는 의료시설 및 운영, 주택건설 등 다른 분야도 다수 포함될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정부 발주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우리 정부가 수주에 적극 참여하는 노력도 필요
    - \* UAE 원전 수주, 터키 등 다른 국가들과 교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에 대한 발전시설 건립 등은 일과성 수주가 아니라 개도국들의 도시화 수요 및 구매력 증진을 반영한 세계적 추세로 해석됨
- 지금까지 수행된 프로젝트들이 처한 공통적 애로사항은 대규모 자금의 조달 애로가 지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해외수출은 곧 인력의 해외파견을 의미하는데 KDI 설문조사(2011년 5월)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의 70%는 해외근무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음

### III. 복지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복지 선순환

김 용 하 순천향대 교수

## 목 차

I. 보건복지 고용 현황 .....	1
II. OECD 국가와의 비교 분석 .....	2
III. 보건복지 적정 고용비율 수준 추정 .....	4
IV. 보건복지 일자리 확대방안 .....	6
<부록1> 보건복지 주요 부문별 관련 수요 .....	9
<부록2> 보건복지 관련 산업 일자리 .....	15

# I 보건복지 고용 현황

- 2011년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이하 보건복지) 취업자수는 1,330천명으로 2005년의 639천명, 2010년의 1,172천명에 이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 취업자 중 보건복지 취업자의 비율은 2005년의 2.80%에서 2011년에는 5.51%로 높아졌음. 6년만에 고용자수가 2배가까이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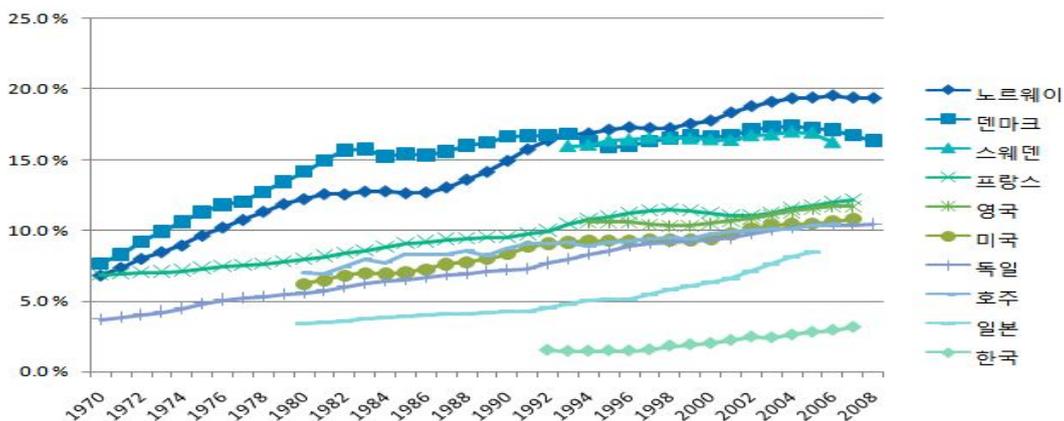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 및 비율 (단위: 천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전년 대비 증감)	22,557	22,856 (299)	23,151 (295)	23,433 (282)	23,577 (144)	23,506 (△71)	23,684 (178)	24,125 (44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년 대비 증감)	590	639 (49)	681 (42)	740 (59)	842 (102)	998 (156)	1,172 (174)	1,330 (158)
비율	2.62	2.80	2.94	3.16	3.57	4.25	4.95	5.5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OECD 주요 선진국들과 보건복지 고용비율<sup>1)</sup>을 비교해보면, 주요 유럽국가들은 70년대 초반 이미 6~7%의 보건복지 고용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까지 3배 가량 증가

■ OECD 주요국의 보건복지 고용비율 증가추이



자료: OECD STAN DB를 이용하여 산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

주: 국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체 산업 대비 보건복지(Health and Social Work)산업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

1) 보건복지취업자수/ 전체취업자수

■ OECD 주요 국가의 전체 고용비율 및 보건복지 고용비율 추이

(단위: %)

국가	고용율	1990	1995	2000	2005	2007
노르웨이	전체	75.6	75.1	79.2	76.7	78.5
	보건복지	15.0	17.2	17.8	19.4	19.4
덴마크	전체	77.1	74.5	77.0	76.8	78.6
	보건복지	16.6	15.9	16.6	17.2	16.7
스웨덴	전체	84.4	73.6	75.6	75.2	77.2
	보건복지	-	16.4	16.4	16.9	-
프랑스	전체	60.4	59.5	61.5	63.5	64.3
	보건복지	9.5	10.9	11.2	11.8	12.2
영국	전체	73.7	70.4	73.4	74.2	73.9
	보건복지	-	10.6	10.5	11.6	11.7
미국	전체	74.3	74.7	76.4	74.2	74.6
	보건복지	8.3	9.3	9.4	10.5	10.8
독일	전체	64.8	65.2	66.2	66.5	70.1
	보건복지	7.2	8.6	9.4	10.4	10.4
호주	전체	69.2	68.7	70.4	73.0	74.5
	보건복지	8.7	9.1	9.7	10.4	-
일본	전체	72.7	74.2	74.4	75.1	77.1
	보건복지	4.2	5.1	6.3	8.5	9.5
한국	전체	63.4	65.9	64.5	67.7	68.3
	보건복지	-	1.5	2.0	2.8	3.2

자료: OECD STAN DB를 이용하여 산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

주: 일본의 2007년 자료는 2006년 일본 통계청 자료

II OECD 국가와의 비교 분석

- 한국(2만6천 PPP \$, '07년)과 1인당 GDP가 유사한 시기에도, 보건·복지 고용수준의 격차는 큰 편
- 일본('02) 7.1%, 미국('94) 9.2%, 독일('01) 9.2%, 영국('00) 10.5%, 스웨덴('00) 16.4%

■ 1인당 GDP(PPP \$) 26천달러 시기의 보건·복지 고용비율 비교

(단위: ppp \$, %)

국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해당연도 <sup>1)</sup>	2007	2002	1994	2001	2000	2000
1인당 GDP <sup>2)</sup>	26,574	26,805	26,686	26,859	26,074	27,761
고용비율 <sup>3)</sup>	3.18	7.14	9.23	9.17	10.47	16.44

자료: OECD STAN DB(고용율) 및 OECD National Accounts(GDP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

주: 1) 최근 한국의 1인당 GDP(PPP \$, 구매력평가반영) 26,574달러와 유사한 각 국가 해당연도이며, 일본, 스웨덴은 2006년 자료임.

2) 1인당 GDP(US \$, current prices, current PPPs)

3) 국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체 산업 대비 보건복지(Health and Social Work)산업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임.

-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1인당 GDP 도달 이후에는 1인당 GDP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고용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점은 별도 분석이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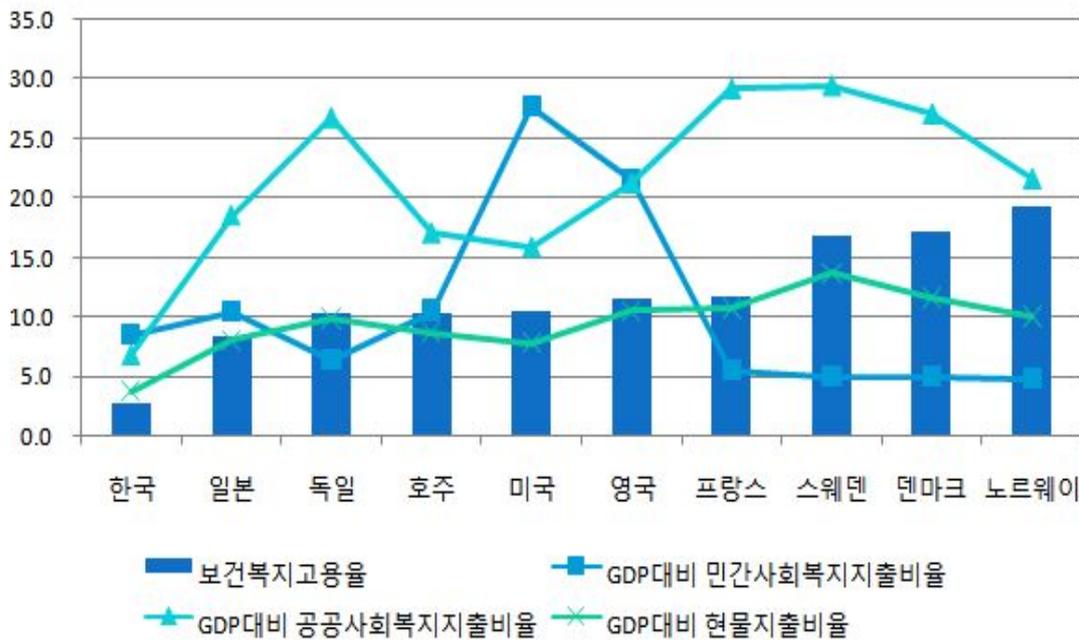
■ 주요선진국 보건복지 고용비율 비교 (2007년 기준)

(단위: ppp \$, %)

국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1인당 GDP <sup>2)</sup>	26,574	30,312	46,434	34,683	34,957	34,328
보건복지 고용비율 <sup>3)</sup>	3.18	9.53	10.80	10.41	11.71	16.25

- 보건복지 고용비율과 사회지출수준을 비교한 결과, GDP 대비 현물(benefit in kind)지출 비율과 매우 유사한 수준을 보임.

■ OECD 주요국의 보건·복지분야 고용비율과 사회지출수준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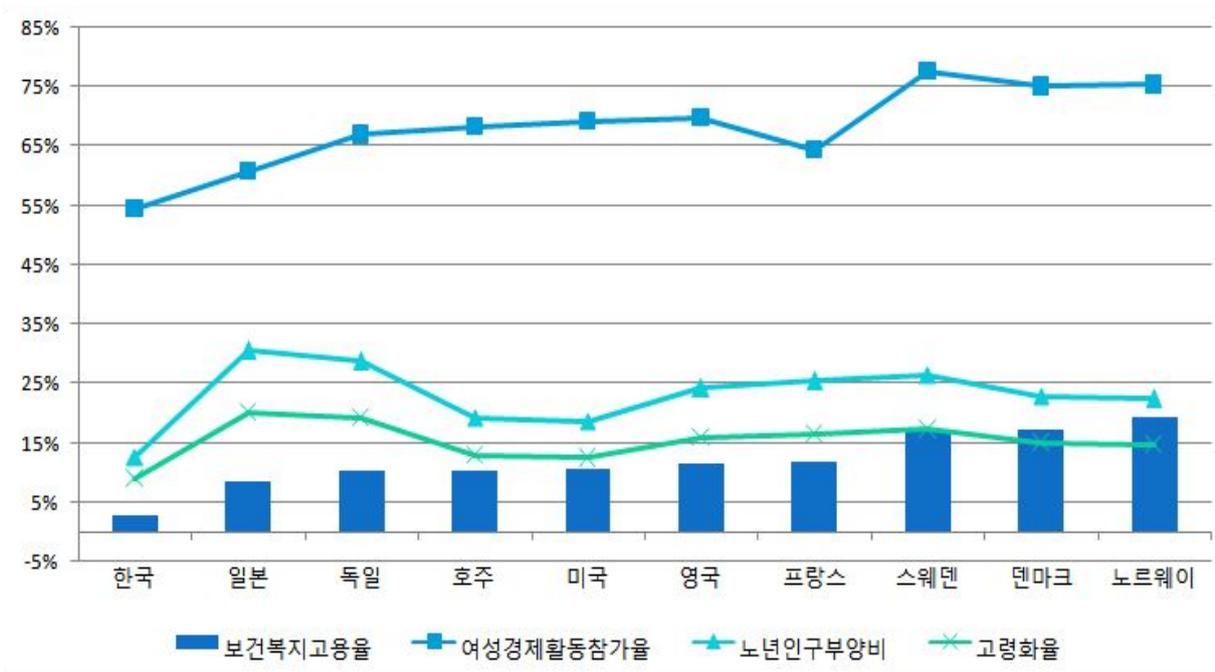
자료: OECD STAN DB를 이용하여 산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

주: 보건복지고용율은 국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체 산업 대비 보건복지(Health and Social Work)산업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

- 미국, 호주의 경우 공공사회지출비율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현물 지출은 높은 편
- 독일의 경우 공공사회지출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보건복지 고용비율과 현물지출은 유사한 수준으로 낮은 편

- OECD 주요 국가의 보건복지 고용비율과 고령화율, 노년인구부양비를 비교한 결과, 보건복지 고용비율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유사한 추세(프랑스 제외)
- 노년인구부양비의 경우 독일, 일본을 제외하고는 국가별 보건복지고용비율 수준과 유사
  - ※ 고령화율: 65세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노년인구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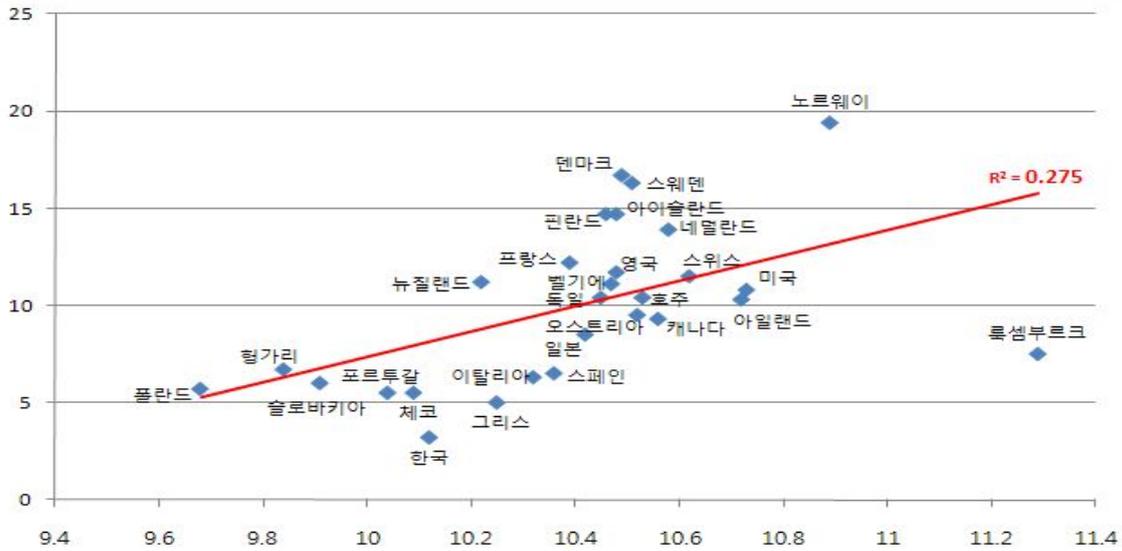
■ OECD 주요국의 보건·복지분야 고용비율과 고령화수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노년인구부양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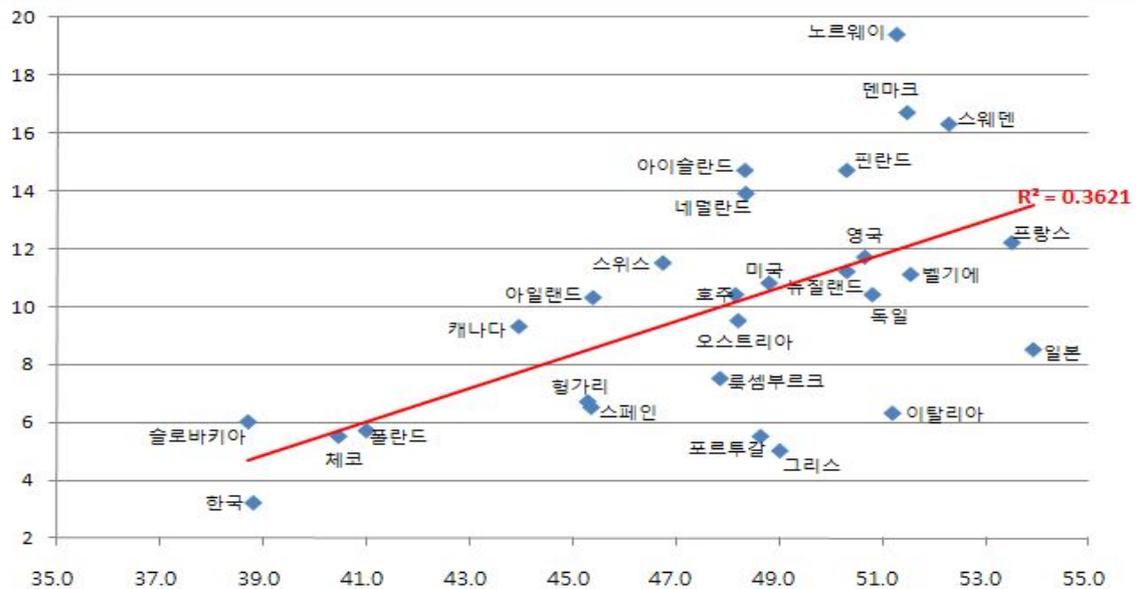
### III 보건복지 적정 고용비율 수준 추정

- 보건복지 적정 고용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인당 GDP와 총부양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적정 고용비율을 추정해 보았음. 우선 2007년 현재 OECD 국가들의 보건복지 고용비율과 1인당 GDP 및 총부양비의 상관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GDP와 보건복지 고용비율의 상관관계 ■



■ 총부양비와 보건복지 고용비율의 상관관계 ■



□ 회귀모형 도출(OECD 국가들의 횡단면적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 1인당 GDP 및 총부양비가 보건복지 고용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적정 보건복지 고용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28개 회원국(보건복지고용비율 자료가 부재한 터키 및 멕시코 제외)의 2007년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 실시

- 종속변수로 보건복지 고용비율(Y)을, 독립변수로 1인당 GDP( $X_1$ )와 총부양비( $X_2$ ) 등 2가지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1인당 GDP 변수는  $\ln(X_1)$ 으로 변환시켰음. 또한 상수항은 제외하고 모형을 설정함. 따라서 기본 모형은 아래 [식 1]과 같음

$$Y = \ln(X_1) + X_2 \quad \text{[식 1]}$$

- 회귀분석을 시행하면 [식 2]와 같이 각 변수의 계수를 산출 할 수 있음. 이 모형의 설명력(adjusted  $R^2$ )은 .896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Y = 1.284X_1 + .490X_2 \quad \text{[식 2]}$$

- 특히 총부양비가 보건복지 고용비율과 정(正)의 관계를 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남. 따라서 부양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 고용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회귀식 [식 2]에 2007년 우리나라의 1인당 logGDP값인 10.12 및 총부양비 38.8을 대입하면 적정 보건복지 고용비율은 6.0%로 추정됨.
  - 2007년 보건복지 고용비율이 3.2%인 점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분야 고용율은 적정 수준에 비해 절반 정도 수준이었음.
  - 2011년 보건복지 고용비율은 5.5%로 선진국과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건복지 고용비율이 선진국보다 저조한 것은 보건복지 수요에 비하여 낮은 보건복지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OECD 국가에 대한 통계분석에 의하면, 보건복지 서비스 일자리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및 합계 출산율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고용율(2011년 59.1%)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문 투자확대를 통해 여성의 종사율이 높은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여야함.
  - 이는 사회 생산성 제고를 통해 GDP 성장을 유발시키는 Mechanism을 가짐.

## IV 보건복지 일자리 확대방안

### □ 정책기조 정립 필요

- 일자리 대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가 노동력 부족국인지 노동력 잉여국가인지 명확히 해야 함.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노동력 부족국이라는 전제하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청년·여성·중고령층 실업 문제에서는 일자리 부족이 지적
- 정부는 우리나라의 적정인구와 생계수단 등에 대하여 비전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함. 경기가 불황일 때는 생계형 일자리 제공이 관건이라면 경기가 정상화되는 상황에서는 소득이 괜찮고 안정성도 높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관건

### □ 서비스 일자리 중요성 부각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고용지표에 따르면 특정산업부문에서 10억원의 생산이 늘어날 때 해당 산업을 포함해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전산업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8.1명에서 2005년 14.7명으로 하락한 후 2009년 14.2명으로 정체되고 있음. 제조업의 취업유발 계수는 2005년 10.1명에서 9.4명으로 감소했음



- 반면에 보건의료 서비스의 취업유발계수는 15.8명으로 제조업보다 높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취업유발계수는 2005년의 29.9에서 2009년에는 45.5로 높아지고 있음

-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것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하여 생산성이 낮은 것이 주원인이므로 서비스업 진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서비스업 일자리 중 그 자체가 생산적인 전기·통신·금융·운수 영역은 매우 한정적이고 대부분의 서비스 일자리는 제조업의 성장이 전제되어야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인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고소득 일자리를 약간 증가시킬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함
- 전통적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함. 대기업 대자본이 무차별적으로 유통시장까지 잠식하는 것은 적절히 통제되어야 함. 동네음식업, 동네수퍼, 미용실 등과 재래시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개인서비스업에 존재하는 각종의 규제도 풀거나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
- 보건복지 부문 일자리 중 상당부분은 조세나 사회보험료에 의존한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 더욱이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 중 상당수는 돌봄(care)과 관련된 것임. 이들 일자리에 대한 보상수준은 높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가 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이러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사자의 임금 혹은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

#### □ 사회안전망 보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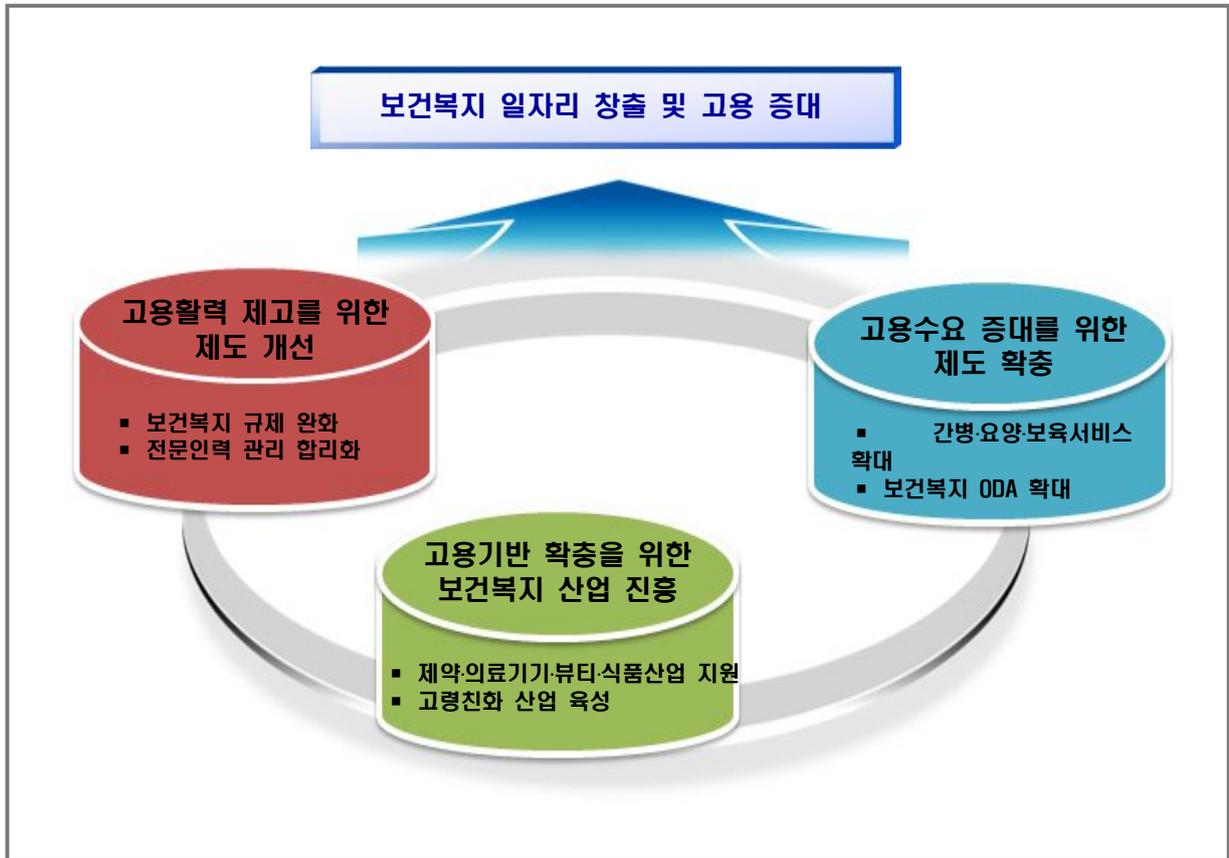
-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필수적인 생계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지더라도 국민 불안은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음. 우리나라보다 실업율이 두배 이상 높은 데도 불구하고 서구사회가 안정적인 것은 바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에 기인함

#### □ 보건복지 일자리는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일자리이지만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 종합적, 적극적인 정부노력에 의하여 고용의 규모나 질이 가변될 수 있음.

- 일시적인 예산투입을 통한 보건복지 일자리는 단기적이고 만들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불황 대응을 위한 소득이전용 일자리로 활용할 수 있을 뿐임
-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일자리는 규제완화 혹은 강화 등을 통하여 만들 수 있으나 관

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규제 변경에 따른 갈등 조정이 필요함. 보건의료 서비스와 보육서비스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 증가 주장이 대표적임

-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로 선진국에 비하여 저조한 보건복지 서비스의 도입 혹은 확충이 있어야 가능함. 대부분 노인 장애인 보육 등 돌봄 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됨. 그러나 이러한 제도 확충에는 사회적 비용을 수반함으로써 채용조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
-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민간 중심의 보건복지 산업에서 창출됨. 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이지만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R&D 등 정부의 초기투자를 통하여 산업발전이 촉발되거나 앞당겨질 수 있음



부록  
1

보건복지 주요 부문별 관련 수요

1.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 노인 장기요양 수요

- 장기요양 수요는 고령화율과 노인(특히 80세 이상의 후기노인)의 장애율,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 증대 및 가족크기의 감소에 따른 비공식적 수발의 감소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서 수요는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나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은 각 국가의 제도설계에 따라 통제·조정될 것임.
  - 국가별로 급여혜택의 관대함의 정도,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의 엄격함 정도, 비용분담 구조와 정도, 서비스의 질 등을 통하여 지출을 통제하고 있음.

□ 노인 장기요양 이용율(coverage)

- 한국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은 노인인구 5.6%(29만명, '09년 5월) 수준으로, '10년에는 대상자 확대를 통해 노인인구의 6.5% 까지 확대 예정
- 호주의 경우 노인의 20.0%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11.1%, 일본은 8.7%, 미국은 7.1%로 국가별 차이가 큼.
- 미국을 제외하고는 시설보호에 비하여 재가서비스 이용율이 높다는 공통점

■ <부표1-1> 국가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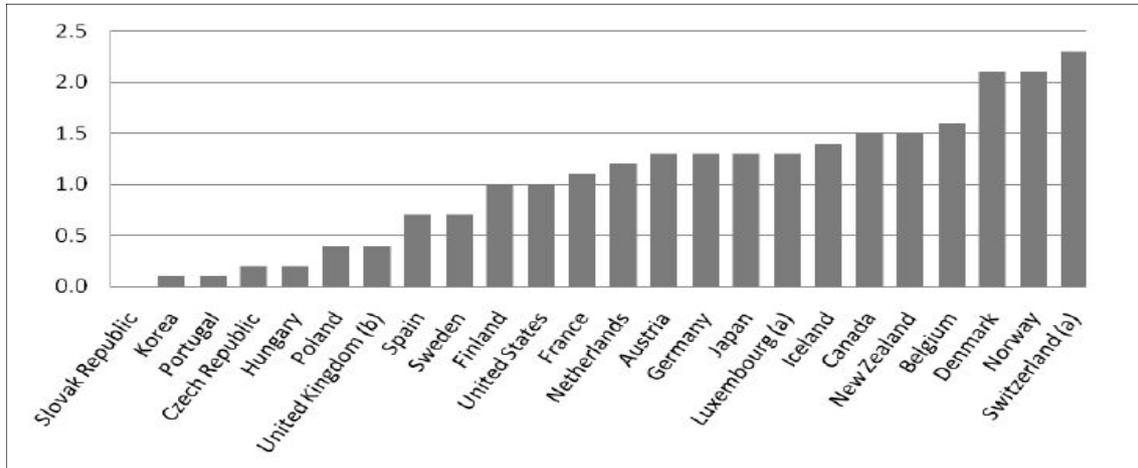
	65세 이상 중 요양서비스 이용자 비율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
한 국	1.4 (2009.5)	4.2 (2009.5)
독 일	3.9 (2003)	7.2 (2003)
일 본	3.2 (2000)	5.5 (2000)
미 국	4.3 (1999)	2.8 (2000)
호 주	5.3 (2003)	14.7 (2003)

자료 OECD, LTC for Older People, the OCD Health Project, 2005; 한국은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2009. 6.)로 산출

□ 노인 장기요양 재정규모

- 평균적으로 GDP의 1.2~1.4%로 고령화율이나 제도 특성에 비하여 국가별 차이는 작은 편

■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기요양재정 비율 ■



자료: OECD, LTC for Older People, the OECD Health Project, 2005.

□ 노인장기요양 인력

- 입수가 가능한 OECD 자료를 통해 노인 장기요양 인력 수준을 비교한 결과, 국가별 차이는 크게 나타났으며, 미국은 노인 7.9명당 1인, 한국은 43명당 1인으로 파악됨.
- ※ 이는 국가별 제도의 특성과 취합된 인력의 범위에 따라 동일선상의 비교에 유의할 필요

■ <부표 1-2> 국가별 65세 이상 인구장기요양서비스 인력 현황 (2006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공식적인 LTC 인력		비공식적인 LTC 인력
	수	인력 1인당 노인 수 (65세이상 인구 수)	
한 국 <sup>1)</sup>	120,342	43 (5,193천명)	-
이탈리아 <sup>2)</sup>	125,717	83 (10,437천명)	4,034,696
네덜란드 <sup>3)</sup>	1,000,000	2.3 (2,310천명)	1,193,000
영 국 <sup>4)</sup>	92,133	102 (9,373천명)	5,062,126
미 국 <sup>5)</sup>	4,385,600	7.9 (38,301천명)	44,443,800

자료: OECD, The Long-term Care Workforce: Overview and Strategies to Adapt Supply to a Growing Demand, 2009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한국은 보건복지가족부 발표자료(2009. 5)

- 주: 1) 공식인력은 취업중인 요양보호사를 의미(2009년 5월현재)  
 2) 공식인력은 시설의 간호사나 돌봄제공자를 의미(2003년 자료)  
 3) 공식인력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나 돌봄제공자를 의미(2005년 자료)  
 4) 공식인력은 시설이나 재가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돌봄제공자를 의미(2001년 자료)  
 5) 공식인력은 시설이나 재가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돌봄제공자를 의미(2004년 자료)

## 2. 장애인 복지 서비스

### □ 장애 출현율

- 국가별 장애 출현율을 비교한 OECD 국가 자료에 의하면, 20% 넘는 장애 출현율이 나타나고 있는 스웨덴을 비롯하여, 전체 19개국 가운데 16개국의 장애 출현율이 10%를 넘는 반면, 한국은 3% 수준
  - 한국의 2005년 현재 출현율은 4.6%, 일본은 2000년 기준 4.8% (전체 연령 기준)

### □ 장애인부문 재정

-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지출은 GDP 대비 평균 2.73%로, 우리나라 지출규모(GDP 대비 0.26%)의 10배가 넘는 수준
  - ※ OECD의 장애인구는 평균 14%로 (20~64세 인구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약 3배

■ <부표 1-3> OECD 주요국의 장애인관련 지출

구분	OECD 주요국						OECD 평균 <sup>2)</sup>	한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GDP대비 %	4.66	3.08	1.67	1.83	1.54	1.40	2.73	0.26

자료: OECD (2003), 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

주: 1) OECD 국가는 '00년 기준, 한국은 '06년 기준

2) OECD 평균은 한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OECD 19개국의 평균임

3) 우리나라의 지출에는 보건복지지출이 포함되나 OECD 지출에는 미포함

## 3. 영유아보육 서비스

### □ 영유아인구 비율

- OECD국가의 총 인구대비 영유아인구비율은 약 6~10% 범위로 미국, 프랑스, 덴마크, 영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 독일 순으로 보육수요가 높음.
  - 한국은 7.1%로, 캐나다와 일본(독일) 중간 수준

### □ OECD국가의 영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공적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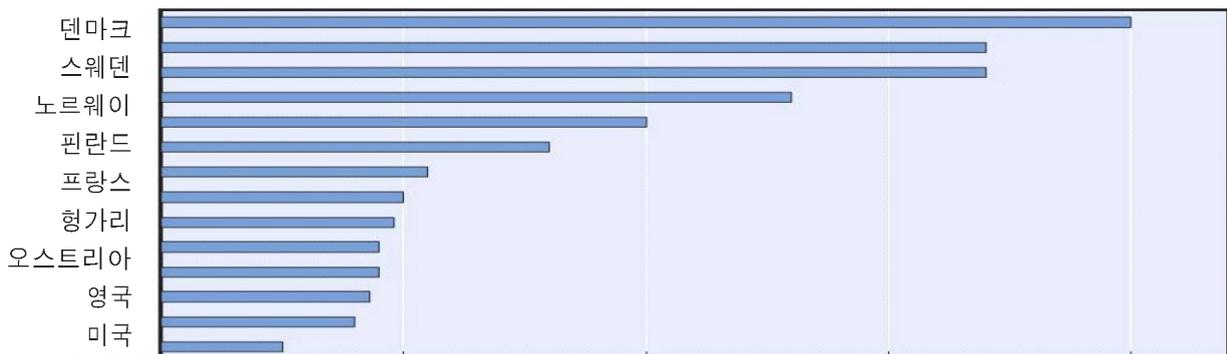
- OECD국가의 보육재정의 공적지출규모는 0.3~2% 범위로, 우리나라의 공적지출규모 (GDP 대비 0.3%)는 저조한 국가군에 포함.
  - ※ 보육재정에는 방과후 서비스는 포함되나 가족수당 제외

- 보육비용의 부모부담은 평균 25~30%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OECD국가 평균의 2배 수준에 육박
  - 영국과 한국은 1996년 이후 영유아서비스 부분의 공적 지출이 3배 이상 확대된 국가로 분류(OECD, 2006)

□ 영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의 비용부담(OECD, 2006 인용)

- OECD국가의 3세 미만 아동 서비스에 대한 부모부담률은 평균적으로 총 비용의 25~30% 수준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부모가 비용의 9~15%를 부담, 영국과 미국은 부모가 대부분 부담, 벨기에와 네덜란드도 부모부담이 높은 편
    - 그러나 벨기에는 2.5세부터, 네덜란드는 4세부터 보편적인 무상서비스를 제공
  - 한국은 부모부담률이 2005년 62%로 OECD국가 평균의 2배 수준

■ OECD 주요 국가의 보육(교육) 서비스(0-6세)에 대한 공적 지출 ■



자료: OECD, Starting Strong, 2006 재인용

주: 이 수치들은 개별 국가들이 2004년 OECD조사에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제공된 수치는 덴마크가 0-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에 연 GDP의 2%를 지출했으며 스웨덴은 1.7%를 지출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핀란드를 포함한 위 국가들은 또한 추가적으로 GDP의 (약) 0.3% 정도 되는 금액을 6-7세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취학 전 학급(pre-school class)에 할당함.

4. 간병서비스

- 선진국들은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의료기관 내의 간호체계 내에서 제공하고, 사회보험에서 지불보상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일본

- 1950년대 이후 간병인은 병원 일용직 무자격자가 활동하여 왔으나, 1994년 신간호체계를 도입하고 사회보험 지불보상체계에 간호보조료 수가를 신설함으로써 개인고용에 의한 간병인 활동 폐지 유도
- 병원에서 간호보조수를 고용하고 그 비율에 따른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여 요양상의 돌봄범위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 유도

□ 미국

- 각 주와 병원에 따라 차이점이 있으나 입원료(room and board charge)에 간호관리료가 포함되어 입원환자는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병원직원에 의해 제공받음.
  - 간호관리료는 원가수준 이상으로 보전되어 간호보조인력을 고용하기에도 충분

□ 독일

- 수발을 포함한 간호요구도(기본간호 및 특수간호)에 따라 간호사를 배정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지불보상시스템 운영
  - 지불보상은 의료와 수발을 구분하여 치료에 따른 간병은 질병보험에서 지불하고, 단순간병은 수발보험에서 지불

**5** 보건의료 서비스

□ 국민의료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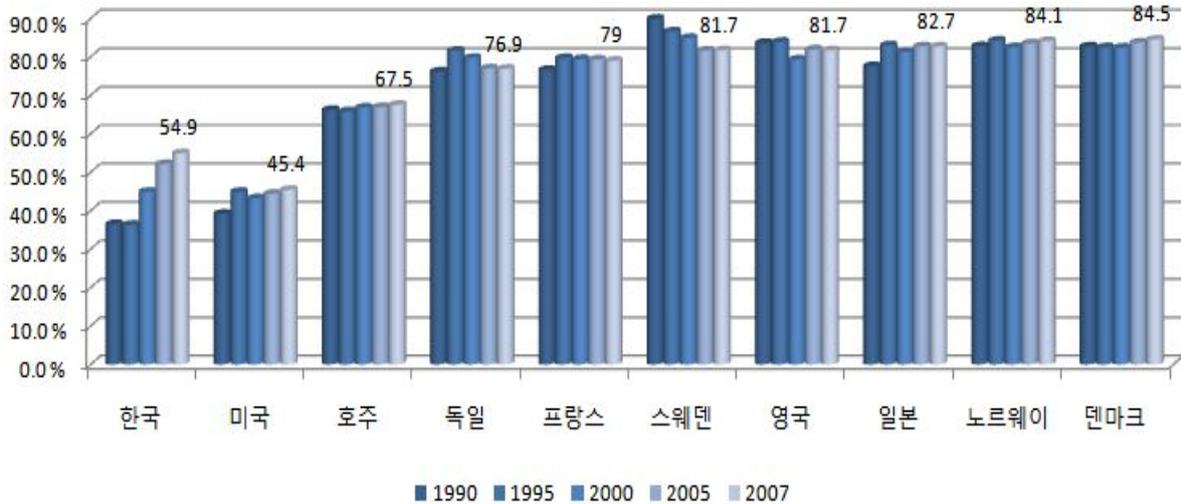
- 2008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규모는 약 67조 2천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1987년에 비해 16배 이상 증가한 것임
  -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주요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향후에도 경제성장을 상회하는 증가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추이

-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7년 30% 미만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1년부터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국민의료비에서 공공부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 다음으로 낮은 비중임

■ OECD 주요 국가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비중 추이(1990년~2007년) ■



**부록 2** **보건 복지 관련 산업 일자리 (복지부)**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보건복지 관련 산업의 취업자 수는 212만 7천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5만 5천명이 증가

(단위: 명, %)

2010.12월말	2011.6월말	10.12월말 대비	
		증감	(%)
1,971,871	2,127,155	155,284	7.9

-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산업에서 증가한 일자리 수(1,068천명)의 1/6에 해당하는 규모

\* 전체 취업자 수(천명) : ('10.12) 23,684 → ('11.6) 24,752 (+1,068천명, 통계청 고용동향)

-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년 상반기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짐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지난해 연말 보다 13만 3천명이 증가한 128만

6천명으로 보건복지관련 산업내 일자리 증가의 85.7%를 차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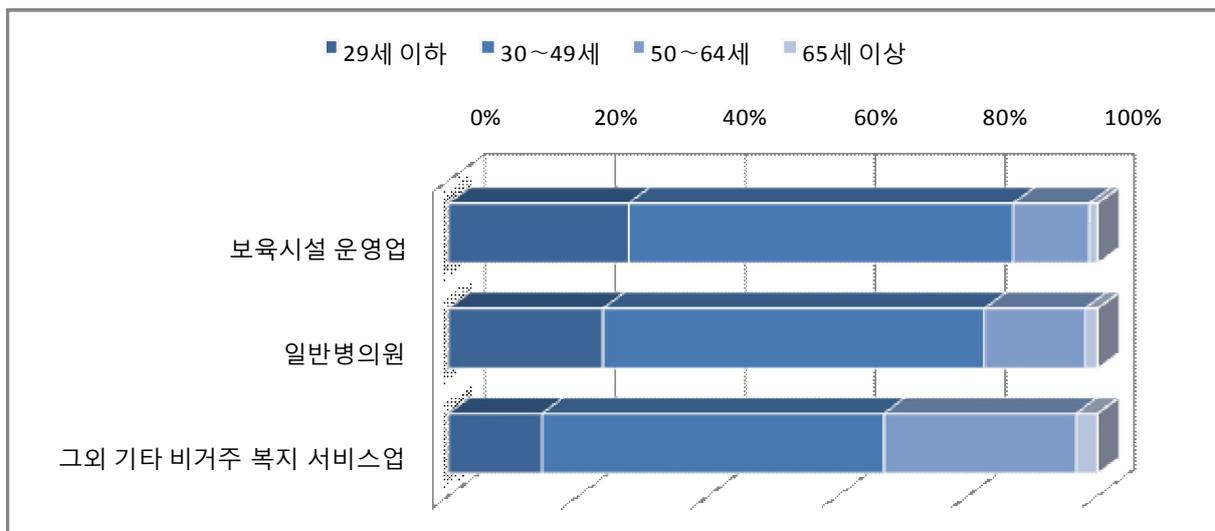
구 분	2010.12(A)	2011.6(B)	증감(B-A)	증가일자리 비중(%)
전체 보건 복지관련 산업	1,971,871	2,127,155	155,284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53,320	1,286,431	133,111	(85.7%)
기타 보건복지관련 산업	818,551	840,724	22,173	(14.3%)

- 세부 업종별로는 **보육시설업**이 지난해 연말에 비해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49천명 ↑)하였으며, 병·의원(28천명 ↑), 사회복지관 등 그 외 기타 비거주복지 서비스업(22천명 ↑), 미용업(19천명 ↑) 순(順)으로 취업자가 크게 증가

(단위 : 명)

구 분	'10.12(A)	'11.6(B)	증감(B-A)	구 분	'10.12(A)	'11.6(B)	증감(B-A)
① 보육시설업	227,979	276,722	48,743 (21.4%)	④ 미용업	188,639	208,003	19,364 (10.3%)
② 일반병·의원	296,965	324,810	27,845 (9.4%)	⑤ 노인 요양복지 시설 운영업	61,644	73,411	11,767 (19.1%)
③ 그외 기타 비 거주 복지 서 비스업	110,599	132,965	22,366 (20.2%)	⑥ 종합병원	236,558	243,141	6,583 (2.8%)

- 고용 증가 상위 3개 업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40대의 고용비중이 가장 높음**



### III. 복지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복지 선순환

-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보건복지관련 산업내 일자리가 전체산업평균에 비해 상용직 비율은 더 높고 임시·일용직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천명, %)

구 분	전체 산업*	보건복지 관련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보건업	사회복지 업
전체	24,752	2,127	1,286	759	528
상용근로자	10,716	1,393	1,046	632	414
구성비(%)	43.3%	65.5%	81.3%	83.3%	78.4%
임시및일용근로자	7,004	184	90	36	54
구성비(%)	28.3%	8.6%	7.0%	4.7%	10.2%
무급가족종사자	1,364	76	2	1	1
구성비(%)	5.5%	3.6%	0.2%	0.1%	0.2%

\* 전체 산업 취업자 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1년 6월기준」

- 특히 09년 이후 증가하던 무급 가족 종사자의 비율이 금년 상반기에 크게 감소한 점은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음

(단위 : 명)

구 분	2009.12	2010.6	2010.12	2011.6	'10.12 대비	
					증감	증감률
전체	1,745,840	1,911,304	1,971,871	2,127,155	155,284	7.9%
상용근로자	1,133,866	1,207,520	1,231,242	1,392,872	161,630	13.1%
자영업자	332,292	341,270	347,456	333,251	-14,205	-4.1%
무급가족 종사자	68,542	78,222	85,270	75,592	-9,679	-11.4%
임시 및 일용근로자	129,217	160,026	169,640	183,675	14,036	8.3%
기타종사자	30,834	44,050	59,995	65,836	5,842	9.7%
파견근로자	51,088	80,217	78,269	75,929	-2,340	-3.0%